

▶ 2017년 공병인 경찰학개론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추록입니다.  
본 추록의 페이지 수와 문제번호는 2017년 공병인 경찰학개론 교과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P.13 6번 문제 아래 추가

행정법·형사법 관련 판결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 Blanco 판결은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 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범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 Escobedo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 ㉣ Miranda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해설 지문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③

P.15 11번 문제 삭제

P.16 13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해설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은 오로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개념은 아니며 서로 일치하는 영역도 있고 별개의 영역도 있다.

정답 ④

P.20 ~ P.21 21번, 22번, 23번, 24번 문제 삭제

P.22 25번 문제 위에 추가

다음 중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1차 채용)

- 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②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④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해설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정답 ①

P.25 34번 문제 삭제

P.26 01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해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정답 ③

P.27 03번 문제 삭제

P.27 04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 ②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협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협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 '위험혐의'의 경우 위협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인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설 ① '손해'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국가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위험혐의'의 경우 위협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인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②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협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해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국가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③

P.31 11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경찰특공대)

-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 ② 사물관할 중 범죄의 수사에 관한 임무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③ 경찰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 해설 ② 사물관할 중 범죄의 수사에 관한 임무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정답 ②

P.34 01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부패가능성이 있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해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정답 ④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해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적 성향에서 찾고 있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P.41 14번, 15번 문제 삭제

P.42 16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인간관 중 ( ㉠ ) 이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 ㉡ )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 ㉢ ) 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 ㉣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 ㉠ ) 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 ① ㉠ X    ㉡ 민주    ㉢ Y    ㉣ 권위    ㉤ X
- ② ㉠ X    ㉡ 권위    ㉢ Y    ㉣ 민주    ㉤ Y
- ③ ㉠ Y    ㉡ 민주    ㉢ X    ㉣ 권위    ㉤ Y
- ④ ㉠ Y    ㉡ 권위    ㉢ X    ㉣ 민주    ㉤ X

해설 ③ 인간관 중 ( Y ) 이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 민주 )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 X ) 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 권위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 Y ) 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정답 ③

P.47 27번 문제 삭제

P.51 05번, 06번 문제 삭제

P.52 07번 문제 삭제

P.56 01번 문제 위에 추가

일제 강점기 중 헌병경찰 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경찰특공대)

- ①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 ②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 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 ③ 헌병은 법적 근거 없이 일반치안을 담당하였다.
- ④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해설 ③ 헌병경찰제도를 지탱해 준 법령으로는 보안법, 집회 단속에 관한 법률, 신문지법, 출판법 등이 있었다.

정답 ③

P.61 01번 문제 위에 추가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18. 1차 채용)

- |                     |                  |
|---------------------|------------------|
| ㉠ 「경찰법」 제정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해설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1946년)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년) - ㉠ 「경찰법」 제정(1991년) - ㉣ 제주 자치경찰 출범(2006년)

정답 ④

- |   |
|---|
| 경찰조직의 주요연혁  |
|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설립(1955년)                                 |
| 2.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년)                                |
| 3. 경정, 경장 2계급 신설하고 2급지 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1969년) - 경찰공무원법 |
| 4.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년)                             |
| 5. 경찰법의 제정(경찰위원회 및 치안행정협의회 설립)(1991년)                   |
| 6.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1996년)                             |
| 7.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제도의 도입(1999년)                              |
| 8. 경찰청 경비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신설(2000년)                        |
| 9.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도의 출범(2006년)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8. 실무종합 경위, 17. 실무종합 경감)

- |   |
|---|
| ㉠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
| ㉡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
| ㉢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
| ㉣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해설 ㉠ 경찰법의 제정(1991년),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1953년), ㉢ 중앙경찰위원회의

2017년 공병인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집 추록

설치(1947년), ㉔ 경찰공무원법의 제정(1969년)

정답 ④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7. 2차 채용)

- ㉑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 ㉒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㉓ 경찰위원회 신설
- ㉔ 「경찰공무원법」 제정
- ㉕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㉒ - ㉑ - ㉕ - ㉓ - ㉔

② ㉒ - ㉑ - ㉓ - ㉕ - ㉔

③ ㉒ - ㉓ - ㉑ - ㉕ - ㉔

④ ㉓ - ㉒ - ㉕ - ㉔ - ㉑

해설 ㉒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 - ㉑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 - ㉓  
 「경찰위원회」 제정(1969) - ㉕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 - ㉔  
 경찰위원회 신설(1991)

정답 ②

P.61 01번 문제 삭제

P.63 06번 문제 삭제

P.64 07번 문제 위에 추가

다음 「경찰현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경찰특공대, 16 경찰간부)

- ㉑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㉒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 ㉓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㉕ 친절한 경찰
- ㉖ 근면한 경찰
- ㉗ 의로운 경찰
- ㉘ 공정한 경찰

① ㉑-㉖

② ㉒-㉘

③ ㉓-㉘

④ ㉓-㉕

해설 ㉑은 의로운 경찰, ㉒은 공정한 경찰, ㉓은 근면한 경찰, ㉔은 친절한 경찰에 관한 설

명이다.

정답 ④

P.64 07번 문제 삭제

P.65 10번 문제 삭제

P.65 10번 문제 아래 추가

5.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서술이다. ㉠부터 ㉤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8 실무종합 경감)

- ㉠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
- ㉢ 구례 화염사 등 다수의 사찰을 소실로부터 구해내는 등 문화경찰의 발자취를 남긴 문화경찰의 표상
-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와 시위대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조

- ① ㉠ 김원봉    ㉡ 최규식    ㉢ 차일혁    ㉤ 안병하
- ② ㉠ 김 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 ③ ㉠ 김원봉    ㉡ 정중수    ㉢ 안병하    ㉤ 차일혁
- ④ ㉠ 김 구    ㉡ 정중수    ㉢ 차일혁    ㉤ 안병하

해설 ㉠은 김구 선생에 대한 설명이고, ㉡은 정중수 경사, ㉢은 차일혁 경무관, ㉤은 안병하 경무관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P.69 07번 문제 삭제

P.71 12번 문제 위에 추가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2018 실무종합 경감)

-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②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 ③ 하급관청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훈령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되고,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④ 훈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징계의 대상은 되나, 훈령 위반한 행위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

정답 ④

P.77 03번 문제 ①번 지문 변경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 · 경찰교육원 ·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 · 경찰인재개발원 ·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P.78 05번 문제 위에 추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1차 채용)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해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정답 ③

P.82 12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법」상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현행 「경찰법」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경찰법 제11조 6항에 명시되어 있다.

정답 ①

P.86 20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③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③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회의 사무도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① 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③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국가경찰 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②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2차 채용)

-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해설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답 ③

P.88 25번 문제 삭제

P.93 35번 문제 아래 추가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치안행정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설치하고,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위원 중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설 ②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경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②

P.97 05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청 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채용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해설 ① 채용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정답 ①

P.105 19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성립·변동·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 ㉡ 「국가공무원법」상 강입은 하위 직급에의 임용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된다.

- ① 없음
- ② ㉠
- ③ ㉢
- ④ ㉠㉢

해설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국가공무원법」상 강입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P.106 23번 문제 아래 추가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 ②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 ④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2년 이내

해설 ④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 이내

정답 ④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특공대)

-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②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③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 해설 ④는 직권휴직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P.111 33번 문제 삭제

P.112 36번 문제 위에 추가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실무중합 경감)

-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③은 종교중립의 의무로서 직무상 의무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채용)

- 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④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모두 옳은 지문이다.

정답 ④

P.117 48번 문제 삭제

P.118 49번 문제 삭제

P.122 56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중앙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2차 채용)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②

P.130 70번 문제 삭제

P.131 73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해설 ㉡ 행정소송 제기시 소청심사 청구는 필수적 절차로서 선택 사항이 아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①

「국가공무원법」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8. 1차 채용)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① ㉠(X) ㉡(X) ㉢(O) ㉣(O)

② ㉠(X) ㉡(O) ㉢(X) ㉣(O)

③ ㉠(O) ㉡(X) ㉢(X) ㉣(X)

④ ㉠(X) ㉡(X) ㉢(X) ㉣(X)

해설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P.139 06번 문제 삭제

P.141 11번 문제 삭제



P.141 12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과 명칭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 경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벌
- ㉢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 경찰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① ㉠ - 대집행      ㉡ - 집행벌      ㉢ - 강제징수      ㉣ - 직접강제
- ② ㉠ - 집행벌      ㉡ - 강제징수      ㉢ - 대집행      ㉣ - 직접강제
- ③ ㉠ - 대집행      ㉡ - 강제징수      ㉢ - 직접강제      ㉣ - 집행벌
- ④ ㉠ - 강제징수      ㉡ - 집행벌      ㉢ - 직접강제      ㉣ - 대집행

해설 ① ㉠ - 대집행, ㉡ - 집행벌, ㉢ - 강제징수, ㉣ - 직접강제  
정답 ①

P.144 18번 문제 삭제

P.151 31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2017 경찰특공대)

- ① 경찰관의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이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자살시도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할 수 없다.  
정답 ④

P.158 43번 문제 삭제

P.161 48번 문제 아래 추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1차 채용)

- 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P.165 56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 ① 무기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 ②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경찰관은 무기사용은 가능하나 위해를 줄 수는 없다.
- ③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불가능하다.
- ④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해설 ②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경찰관은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 ④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①

P.168 63번 문제 삭제

P.170 65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답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③

P.172 69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15만원이다.
-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23만원이다.
- ③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

을 지급할 수 없다.

해설 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10만원이다.

정답 ①

P.173 01번 문제 위에 추가

조직편성의 원리 중 명령통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 종합 경감)

- ①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경찰의 경우에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
- ③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 ④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해설 ④는 계층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P.180 07번 문제 삭제

P.180 07번 문제 아래 추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구분하였다.
-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해설 ③ 사회적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정답 ③

P.183 01번 문제 위에 추가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1차 채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P.184 03번 문제 아래 추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가 개최되고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다. 다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종합정책질의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부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 ②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 ③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④ 부별 심사 → 종합정책질의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해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종합정책질의 → 부처별 심의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의 순서로 심사한다.

정답 ②

P.186 07번 문제 아래 추가

다음 설명과 같은 특성을 가진 예산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지출의 대상 ·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 분류
-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지만, 기

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① 품목별 예산제도
- ② 영점기준예산
- ③ 자본예산제도
- ④ 일몰법

해설 설문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①

P.189 01번 문제 위에 추가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1차 채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 ③ 분임물품관리관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④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해설 ①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정답 ④

P.190 02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채용)

- ①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변태성벽이 있는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다.

해설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징계의 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이다.

정답 ④

P.190 03번 문제 아래 추가

다음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3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 선정에는 차량주행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 의경 신입운전요원은 2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X) ㉡(X) ㉢(O) ㉣(X)
- ② ㉠(X) ㉡(O) ㉢(X) ㉣(O)
- ③ ㉠(O) ㉡(X) ㉢(O) ㉣(O)
- ④ ㉠(O) ㉡(O) ㉢(X) ㉣(X)

해설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 전·의경 신입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차량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행정용·순찰용·특수구난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주행거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사용기간, 사용부서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 ㉣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선임탑승자, 2차 운전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 ㉔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사용자), 2차 선임탑승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정답 ④

P.191 05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성)

- ①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안전지역)을 향한다.
- ②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범이 심한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해설 ③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의 경우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③

P.200 06번 문제 삭제

P.200 07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감찰관은 직무상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감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해설 ② 감찰관은 직무상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모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정답 ①

P.204 14번 문제 아래 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불복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P.209 26번 문제 삭제

P.212 01번 문제 위에 추가

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18. 1차 채용)

- 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 ④ 수사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해설 ①②③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의 논거이고, ④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의 논거이다.

정답 ④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2017. 경찰특공대)

- 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 ② 국가공권력의 대표적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는 논거이다.
- ③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 ④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해설 ④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의 논거이다.

정답 ④

P.216 01번 문제 위에 추가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실무 종합 경위)

- ㉠ 고전학과 범죄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 생물학·심리학적 이론은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통한 범죄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 사회학적 이론은 범죄기회의 제거와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사회발전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나,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기회의 제거와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사회발전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학적 이론이고,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고전학파의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비판이다..

정답 ④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④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

해설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①

P.217 04번, 05번 문제 삭제

P.220 04번 문제 삭제

P.221 05번 문제 위에 추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의 직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2017. 경찰특공대)

- ①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 ②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 ③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 ④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해설 ④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에 해당한다.

정답 ④

P.225 12번 문제 위에 추가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고,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 ②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영역성의 강화’라고 하고,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있다.
- ③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통제’라고 하고, 종류로는 차단기·방범창 설치, 체육시설에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등이 있다.
- ④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라고 하고,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등이 있다.

해설 ③ 체육시설에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는 ‘활동의 활성화’에 해당한다.

정답 ③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자연적 감시의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 ② 자연적 접근통제의 종류로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가 있다.
- ③ 영역성의 강화란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 ④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

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해설 ③은 ‘자연적 접근통제’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P.228 17번 문제 삭제

P.231 03번 문제 삭제

P.231 04번 문제 위에 추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태양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② 성매매에 이용됨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
- ③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④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해설 ② 성매매에 이용됨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P.238 17번 문제 삭제

P.239 18번 문제 삭제

P.240 20번 문제 위에 추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1차 채용)

-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유실·매물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

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②

P.240 20번 문제 삭제

P.242 23번 문제 삭제

P.242 24번 문제 해설과 정답 변경

해설 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 삭제  
정답 ③에서 ②로 변경

P.242 24번 문제 아래 추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를 범한 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 경범죄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출판물의 부당게재
- ② 거짓신고
- ③ 위험한 불씨 사용
- ④ 암표매매

해설 ② 거짓신고는 법정형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경미한 범죄(5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해당하지 않아서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정답 ②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2017. 경찰특공대)

-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③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④ 관공서 주취소란죄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주거가 명확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④

P.245 30번 문제 삭제

P.251 42번 문제 삭제

P.252 43번 문제 삭제

P.252 44번 문제 위에 추가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1차 채용)

- 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③ 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해설 ③

P.254 47번 문제 삭제

P.255 50번 문제 삭제

P.260 05번 문제 아래 추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상해치사
- ② 협박
- ③ 특수공갈
- ④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해설 ① 상해치사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P.265 15번 문제 아래 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은폐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 ② 응급조치상의 격리란 아동학대행위자를 72시간(단,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을 기한으로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 ③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해설 ①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지성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P.266 18번 문제 위에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 ②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 ③ 야파(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원료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 ④ 메스카린(Mescaline)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해설 ②는 L.S.D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P.272 07번 문제 삭제

P.274 03번 문제 위에 추가

행사안전경비 중 부대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 경력은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 경력배치는 항상 군중이 집결되기 전부터 사전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예비대의 운용여부 판단은 주최측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 ㉣ 예비대가 관중석에 배치될 경우 관중이 잘 보이도록 행사장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예비대의 운용여부 판단은 경찰관단하에 실시할 사항이다.

㉣ 예비대가 관중석에 배치될 경우 단시간 내에 혼란예상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비대를 통로 주변 등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 ①

P.275 06번 문제 삭제

P.275 07번 문제 위에 추가

A경찰서 경비계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소 경비대책을 수립하였다.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 ㉡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에게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다.
- ㉢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은 수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문과 후문을 개방한다.
- ㉣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개표소별로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한전 등 관계요원을 대기시켜 자가발전시설이나 예비조명기구를 확보하여 화재·정전사고 등에 대비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원조요구로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예외적으로

무기 등을 휴대할 수 있다.

㉔ 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정답 ③

P.280 17번 문제 삭제

P.282 22번 문제 아래 추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1차 채용)

- ① 선수승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며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 ②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그 발생징후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 ③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 ④ 경쟁행위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해설 ①은 지연정화법에 관한 설명이고, ③은 경쟁행위법에 대한 설명이며, ④는 선수승화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P.287 33번 문제 삭제

P.288 34번 문제 위에 추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②’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정답 ①

P.290 39번 문제 삭제

P.291 40번 문제 위에 추가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 ② ‘갑중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을중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해설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을중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정답 ②

P.293 46번 문제 위에 추가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정착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 ④ 비상근무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해설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는 ‘정위치근무’에 대한 설명이다.

-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정답 ④

P.294 47번 문제 위에 추가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해설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정답 ③

P.299 01번 문제 위에 추가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② ‘교차로’란 ‘+’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④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해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정답 ③

P.302 06번 문제 삭제

P.302 07번 문제 위에 추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③ 위 ‘②’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때 과도하게 속도를 올리는 등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해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정답 ④

P.304 10번 문제 아래 추가

「도로교통법」상 ‘서행하여야 할 장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특공대)

- 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④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해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일시정지구간이다.

정답 ③

P.304 11번 문제 법률개정으로 개정법률에 맞게 바뀌야 합니다.

P.305 12번 문제 법률개정으로 개정법률에 맞게 바뀌야 합니다.

P.306 14번 문제 위에 추가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1차 채용)

- ① 「형사소송법」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받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③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설 ④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정답 ④

P.307 15번 문제 위에 추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 ①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③

P.313 29번 문제 위에 추가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실무종합 경감)

- ①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택시 운전자인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되지 않는다.
- ④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② 교차로에서 적색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P.320 41번 문제 위에 추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③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④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해설 ②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P.320 42번 문제 아래와 같이 교체

4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1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4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P.320 42번 해설 ㉠ 아래와 같이 교체

㉠ 통행우선순위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1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통행우선순위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P.321 44번 문제 아래와 같이 교체

4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1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2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323 48번 문제 위에 추가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 ㉠ )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 ㉡ )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 ㉢ )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 ㉣ )의 화물자동차

- ① ㉠ 이하 ㉡ 미만 ㉢ 미만 ㉣ 미만
- ② ㉠ 이하 ㉡ 미만 ㉢ 이하 ㉣ 미만
- ③ ㉠ 미만 ㉡ 이하 ㉢ 미만 ㉣ 이하
- ④ ㉠ 이하 ㉡ 미만 ㉢ 이하 ㉣ 이하

해설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정답 ④

P.326 55번 문제 삭제

P.327 56번 문제 아래 추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채용)

- ①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④ 교통상의 위협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①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①

P.333 68번 문제 삭제

P.333 68번 문제 아래 추가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때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순 물질 피해만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연습면허 취소의 예외사유이다.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사유이다.

정답 ②

P.337 74번 문제 삭제

P.339 02번 문제 삭제

P.341 07번 문제 삭제

P.344 14번 문제 삭제

P.349 10번 문제 삭제

P.351 13번 문제 위에 추가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도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④

P.353 01번 문제 위에 추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주관자(主管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해설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정답 ③

P.356 07번 문제 아래 추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실무종합 경감)

- ① 甲단체가 A공원(전북군산경찰서 관할)에서 옥외집회를 갖고, B광장(충남서산경찰서 관할)까지 행진을 하려는 경우 甲단체의 대표자이자 주최자인 乙은 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신고서의 형식적인 미비점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통고를 할 수 있다.
-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① 집회와 시위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이므로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회신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통고를 할 수 없다.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중복집회신고에서 먼저 신고하여 집회를 여는 주최자가 철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한다.

정답 ③

P.368 28번 문제 위에 추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확정기 등의 소음기준[단위: Leq dB(A)] 및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1차 채용)

- 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해뜨기 후~해지기 전)에 확정기 등의 소음 기준은 65 이하이다.
- ② 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확정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 ③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 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된다.
- ④ 확정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해설 ③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된다.

정답 ③

P.371 01번 문제 삭제

P.372 01번 문제 삭제

P.373 02번 문제 삭제

P.375 05번 문제 삭제

P.380 15번 문제 위에 추가

공작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① '관찰묘사'란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찰과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의 현상 및 사건의 진말을 감지하는 과정을 말하는 묘사로 구분된다.
- ② '가장'이란 정보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의 정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외적·내적 형태를 말한다.
- ③ '연락'이란 비밀공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하급 인원이나 기관 간에 비밀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첩보·문서·관념·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한다.
- ④ '신호'란 비밀공작활동에 있어서 조직원 상호 간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를 말한다.

해설 ①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묘사와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의 현상 및 사건의 진말을 감지하는 과정을 말하는 관찰로 구분된다.

정답 ①

P.381 17번 문제 삭제

P.385 10번 문제 아래 추가

「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8. 1차 채용)

-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① ㉠(O) ㉡(X) ㉢(O) ㉣(X)
- ② ㉠(X) ㉡(O) ㉢(X) ㉣(O)

③ ㉠(O) ㉡(X) ㉢(X) ㉣(X)

④ ㉠(O) ㉡(O) ㉢(O) ㉣(O)

해설 지문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④

P.390 20번 문제 삭제

P.391 03번 문제 위에 추가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공채)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으로부터 출소 후 10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0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으로부터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법무부차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②

P.395 11번 문제 삭제

P.399 12번 문제 아래 추가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 정부의 해외공민증과 중국정부의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한 채 중국에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를 ‘북한국적 중국동포(조교)’라고 부른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등급으로서 ‘나급’은 거주지 보호대상자 가운데 북한에서 중요 직책에 종사하여 신변위해를 당할 잠재적 우려가 있는 자와 사회정착이 심히 불안정하여 특별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해설 ③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③

P.403 01번 문제 아래 추가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2차 채용)

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③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해설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②

P.405 05번 문제 위에 추가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필요요건과 절차는 갖추어졌으며,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18. 실무종합 경위)

-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일 이내
- ㉢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 )일 이내
-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 ( )일 이내

- ① 153
- ② 168
- ③ 180
- ④ 205

해설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15)일 이내

-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30)일 이내
- ㉢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15)일 이내
- ㉣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30)일 이내
-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 (90)일 이내

정답 ③

P.407 09번 문제 삭제

P.410 15번 문제 위에 추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그에 대한 예시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실무종합 경감)

- A-(㉠), 공무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의 공무를 수행하는 미국인
- D-(㉡), 유학 - 서울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중국인
- E-(㉢), 예술홍행 - 수익을 목적으로 광고·패션모델로 활동하려는 우크라이나인
- F-(㉣), 결혼이민 -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베트남인

- ① 12
- ② 14
- ③ 16
- ④ 19

해설 ㉠ A-( 2 ), 공무, ㉡ D-( 2 ), 유학, ㉢ E-( 6 ), 예술홍행, ㉣ F-( 6 ), 결혼이민  
정답 ③

P.413 21번, 22번 문제 삭제

P.415 04번 문제 아래 추가

「범죄인 인도법」의 인도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1차 채용)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으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으로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정답 ②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 ①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 아직 명문의 규정은 없다.
-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상호주의는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4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④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③

P.424 22번 문제 아래 추가

A경찰서 소속 김 순경은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의뢰하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수배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2017. 1차 경기북부 여경, 2017. 경찰특공대)

- ① 황색수배서
- ② 녹색수배서
- ③ 흑색수배서
- ④ 청색수배서

해설 가출인의 신원확인인 황색 수배서에 의한다.

정답 ①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②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④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해설 ③ 사망자의 신원확인인 흑색수배서이다.

정답 ③

P.426 01번 문제 삭제

P.427 02번 문제 삭제

P.429 03번 문제 아래 추가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8. 실무종합 경위)

(㉠)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는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 ① ㉠ - Crandon                      ㉡ - C. R. Jeffery
- ② ㉠ - Crandon                      ㉡ - Sir Robert Mark
- ③ ㉠ - Ericson                      ㉡ - Sir Robert Mark
- ④ ㉠ - Ericson                      ㉡ - C. R. Jeffery

해설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Sir Robert Mark)는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정답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부터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18. 1차 채용)

- 중재위원회는 (㉠)명 이상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① 124
- ② 125
- ③ 134
- ④ 135

해설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③